도의회 광장

2021 06 제74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239 | www.council.jeju.kr ISSN 2671-9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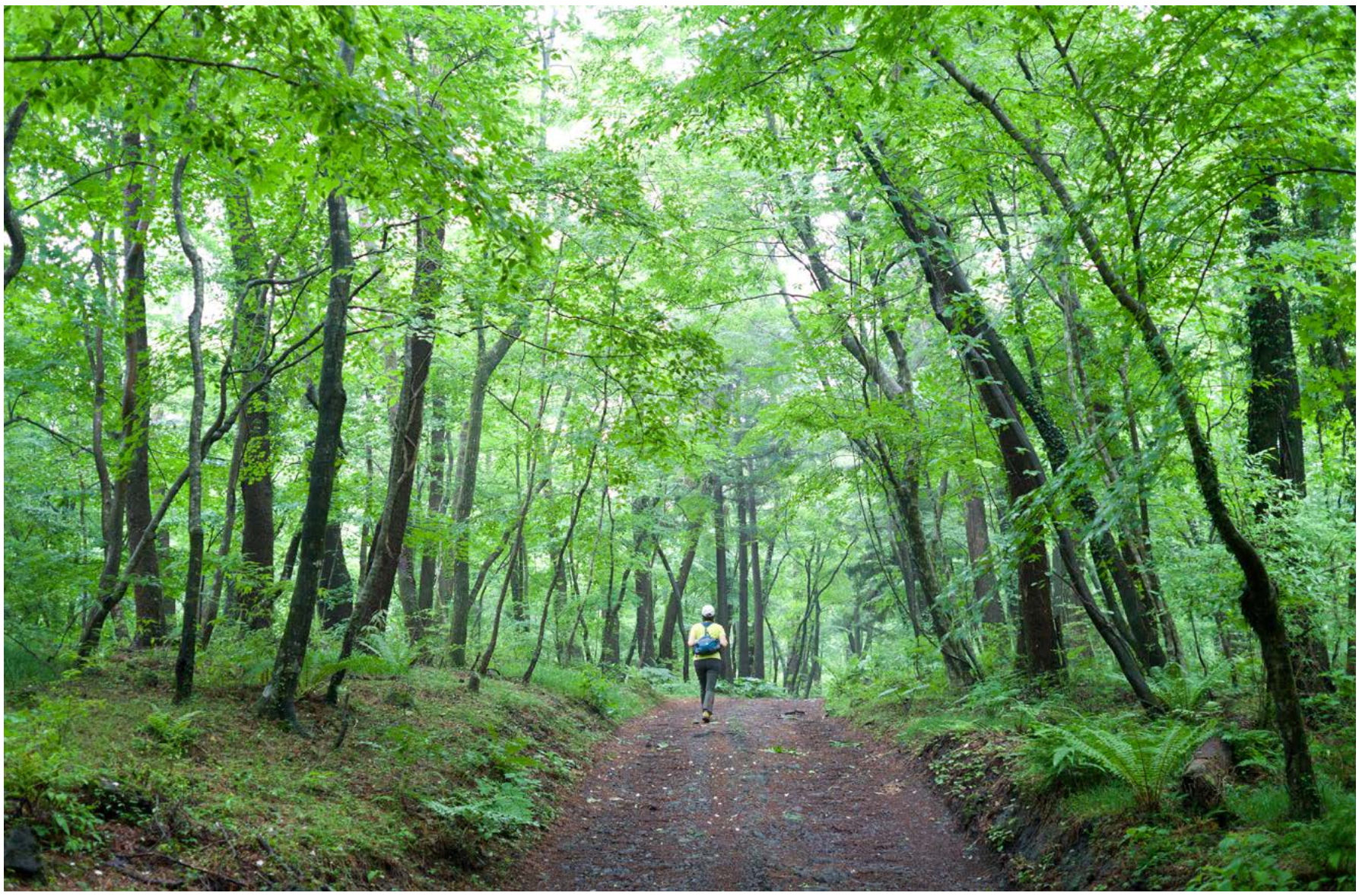
02 제396회 제1차 정례회

03/07 주요 이슈

08 생생 의정활동

10 함께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농익은 숲, 제주 6월 6월 제주는 산으로 바다로 푸르름이 더해간다. 2021년 한해의 절반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채웠다. 이제 우리는 더욱 자유롭게 열릴 세상을 꿈꾸며 희망을 품고 또 한 걸음 나아간다. 그 희망의 씨앗을 녹음이 짙어가는 숲길에서 만날 수도 있으리/사려니숲에서.

"지난해 결산심사, 적극 재정 실행 면밀히 들여다 볼 것"

제39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6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6일간 진행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안과 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과 조례안 심사가 이뤄진다.

특히 2020 회계연도의 결산심사는 제주도가 적극 재정을 실행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을 예고했다.

좌남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제주도의 예산집행률은 89.5%, 세계 잉여금은 7,832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436억 원"이라며, "이는 예산집행률은 낮아지고 잉여금과 이월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결산심사에서 코로나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회생에 중점을 둬 세심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상임위에 도내 16개소에 이르는 도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불필요한 대행사업 수행여부, 사업성과의 정확한 평가를 당부했다.

특히 좌남수 의장은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강정마을 상생협력안에 주민 사면복권과 트라우마 치유, 주민활동 기록사업지원도 보완해 진정한 화해와 상생에 도의회가 협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개회사

"강정마을 상생 및 화합 위해 모두가 나설 때"

제396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6월 15일 열린 제39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강정마을의 갈등 종식과 상생 및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남수 의장은 "도의회는 강정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서' 내용을 보완했다."며 서두를 열었다.

이어 "대통령 공약사항인 주민 사면복권과 트라우마 치유, 주민 활동 기록사업 지원 등을 이번에 추가했다."며, "강정마을의 갈등 종식과 상생, 그리고 화합을 위해 도의회가 먼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제 곧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휴식과 힐링을 위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한 후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지난 회기에 도의회에서 채택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며, "전 도민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안전해야 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침체에 빠진 제주경제도 살릴 수 있다."며 백신접종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좌남수 의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권도전에 앞서 사퇴하는 마지막 날까지 도민들을 우선 생각해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설계가 필요하다면 도민에게 먼저 보고하고 도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성패가 주민참여에 달려있고, 제주의 역할이 우리나라 지방분권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라면,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좌남수 의장은 "도내 폐교가 방치돼 지역에 흉물이 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계속되는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장·단기적 활용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향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거점 공간 조성 등 다양한 폐교 활용 대책과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분 발언

"옛 탐라대 부지에 '지방의정연수원' 유치해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6월 15일 열린 제39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의정연수원'을 현 서귀포시 탐라대 부지에 유치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그리고 그 지방자치의 선두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있다는 점 역시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주도의회는 정부 중앙부처, 전국 광역·기초의회 할 것 없이 매년 많은 기관들이 의회를 찾아, 와서 배우는 지방자치 벤치마킹의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됐던 지방의회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필두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라며, "이에 발맞춰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공식화한 '지방의정연수원'을 현 서귀포시 탐라대 부지에 유치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역시도의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총 3,756명의 지방의회 의원과, 8,000여 명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정연수원이 서귀포시에 설립된다면 이로 인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서귀포 지역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전국 방방곡곡의 주민의 대표인 모든 지방의원에게 제주4.3과 평화와 인권의 가치도 함께 가르쳐 제주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정연수원 유치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그렇지만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의정연수원을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원마을 주민들께서도 이제는 대학이 아닌 '연수원' 또는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계신다."라며, "현 탐라대학교 부지에 '지방의정연수원'유치와 함께 카이스트, 한국체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스포츠, 예술, 의과학 관련 국립대의 연구 및 교육기능 유치도 함께 추진해 제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제주 버스 완전 공영제 전환하자"

고은실 의원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교통복지,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6월 15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고은실 의원은 "원지사가 많은 현안의 갈등양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도정을 떠나려 하고 있다."면서, 버스준공영제의 논의가 지금 시급하다고 말문을 뗐다.

고 의원은 현행 버스준공영제에 매년 천억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성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밝혔다. 특히 수송률과 도민 서비스의 질은 제자리 걸음인 반면 매년 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데에도, 경영혁신은 없고 도덕적 해이만 심각해 사업주만 배불리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제주도가 지속적인 버스노동자들의 근로의 권리 침해에도 이들에 대한 복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조차 관리감독하지 않는다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에 따라 고의원은 "차라리 공공측면을 강화해 완전 공영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제주도가 3억원을 들여 시행예정인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에 대해서도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라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는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도 덧붙였다.

4·3특별위원회

수악 주둔소, 정방폭포 답사 4·3의 의미 상기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이 6월 10일 2차 4·3유적지 현장답사에 나섰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4·3유적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유적지 현장 확인을 통한 보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악주둔소 및 정방폭포 등을 답사했다고 밝혔다.

강철남 위원장은 "수악주둔소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소재한 4·3유적지로써 1949년~1950년 사이 중산간 지역에 있던 무장대를 토벌하기 위한 경찰의 주둔지 중의 하나"라며, "1953년 11월 20일 공식적으로 철수한 후 사용되지 않아 세월이 지나면서 한라산 밀림지대에 숨겨져 있었다가 2000년 11월 4·3사건 유적지 탐사팀에 의해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현재 4·3유적지 중 유일하게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유적으로 당시 토벌대의 생활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방폭포를 방문한 강철남 위원장은 "정방폭포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지만 73년 전에는 무수히 쌓인 시체와 핏물이 마르지 않았던 죽음의 학살터였다."며, "4·3사건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들의 한과 슬픔이 서려있는 역사적 장소임을 상기하고자 답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4·3특별위원회는 5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4·3유적지 2~3개소 현장답사에 나설 예정이며, 3차 현장 답사는 7월 23일(금)에 관음사와 이덕구 신전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순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등 민주당 29명 전원의 이름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통과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강철남 4·3특위 위원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은 우리 제주4·3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부수립 과정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여순사건의 희생자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이 80대, 90대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철남 위원장은 "과거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에서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여 4·3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조해준 바 있었다."며, "이번 여순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안의 처리도 4·3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안은 6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JDC, 취약계층 '밥걱정 없는 제주' 협약

밥걱정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의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손을 맞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6월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9차 '밥 걱정 없는 제주' 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축으로 푸드마켓 기부 물품이 부족해 쌀을 제때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취약계층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푸드마켓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긴급지원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부식품과 기타 생필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기관은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JDC(이사장 문대림)이다.

이들은 앞으로 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호 유기적인 공동협력과 상생 실천을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JDC는 500만원 상당의 쌀(100포대 분량)을 제주지역 취약계층에 식품 제공 복지서비스로 지원한다.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강성민 위원장은 "푸드마켓을 포함한 기부식품 제공사업이 코로나19와 행정의 관심 부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JDC의 첫 식품 기부를 시작으로 도민 사회 내에 많은 식품 기부 붐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하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제5차 임시회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월 21일 충북도의회에서 제5차 임시회를 갖고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송지용 전북도의장은 "보훈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이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위탁병원 진료시에는 약제비가 감면되지 않아 의료지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보훈기본법상 보훈 대상자는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해야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지원을 위한 시책도 마련토록 규정됐다."며, "보훈 대상자의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은 전액 면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농림수산업자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활성화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특히 최근 일본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즉각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주요 이슈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 찾는다

제16회 제주포럼 의회세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 탐색에 나선다.

제주도의회는 6월 24일부터 열리는 제16회 제주포럼 의회세션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지역공동체 건설: 정치적 갈등 완화를 위한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 연구"를 주제로 미국과 일본 등 국내외 의회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주형 지방정부 기관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는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사진)이 좌장을 맡아 대통령소속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안영훈 특별위원과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홍준현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주영 교수가 「제주형 기관통합형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특별강연으로 미국 메릴랜드 주의원인 마크 창(Mark S. CHANG)과 일본 요코하마시 시티넷 연구소장인 오노자키 노부유키가 각각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구성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지정 토론자로 정민구 부의장,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원장,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이 나서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제주포럼에 의회세션을 마련한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제주를 비롯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한결같이 '기관대립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과 그에 따른 한계 및 대안을 짚어보기 위해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속에서 제주의 특색에 맞고 도민의 요구에 보다 부응하는 입법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연구하는데 의회가 나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청년에게 청년대상을'…좌남수 의장 조례 발의

제주사회를 이끌어온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대상'을 주고, 예우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한경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을 제39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에는 수십 년간 제주 청년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창의적·능동적으로 제주사회를 이끌어온 청년에 대해 청년의날에 청년대상을 수여하고, 예우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청년대상은 혁신역량, 도전정신, 사회기여, 특별공로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수여된다.

좌 의장은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어야 할 청년들이 '3포(취업·결혼·출산 포기) 세대' '5포(내집 마련·인간관계 포기) 세대' '7포(꿈·희망 포기)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들의 사회적 기대 가치가 급속히 상실해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수상에 대한 예우를 통해 더욱 건강한 삶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만나 제주 백신 우선 접종 건의

좌남수 의장, 김경학 의원, 원희룡 지사 김 총리 면담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김경학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6월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과 관광업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도민의 집단 면역 형성으로 제주도민과 제주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우선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힐링과 여행의 공간이기 때문에 제주 방역 위기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상처가 될 것"이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규모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주도민의 집단면역 수준인 49만명 분의 백신을 우선 배정해 달라."고 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제주는 전 국민이 즐겨 찾는 지역으로써 제주도민의 안전은 당연히 중요하다."며, "다만 고위험군 우선 접종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를 전국적 집단면역 모델로 삼는 것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읍면동 자체예산보다 많은 재배정 지적

지난해 행정시에 배정된 예산 중 절반가량이 소관 읍면동으로 다시 배정되는가 하면 일부 읍면동은 자체 예산보다 행정시에서 내려보낸 '재배정' 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력 부족 등으로 허덕이는 읍면동에 과도한 재배정 예산이 투입되면서 현장 중심 행정을 실행하기에 과도한 업무가 부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6월 21일 도의회 제396회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의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철남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 말했지만 지난해 제주시 재배정 예산이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며, "읍면동이 여러가지로 어렵고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재배정이 많으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제주도의 예산 재배정 현황을 보면 제주시는 사무관리비 등 168건의 예산 1258억원 중 6361억원(46.8%)을 한림읍 등에 다시 배정했다.

서귀포시는 사무관리비 등 114건의 예산 574억원 중 348억원(59.6%)을 대정읍 등에 다시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읍면동은 읍면동별 자체 예산보다 재배정 예산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있었다.

강 의원은 "예산 재배정은 의회의 예산 심의 당시 집행 목적과는 달리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 재배정에 필요한 행정절차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며, "하부 기관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예산 편성 시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편성 시에 구체화해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동체 회복, 상생협약 동의안 관련 강정마을회와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6월 11일 의사당 소통마당에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약 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고자 강정마을회(회장 강희봉)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 6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생협약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동의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하면서, "이에 강정마을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동의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께서 협약서 내용과 관련해 주민 사면복권, 트라우마 극복 등의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강정공동체가 빠른 시일 내에 화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상우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의회에서 협약 관련 좋은 의견을 주셔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의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라면서, "기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병원에서 환자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듯 모든 마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형평성 제기시 도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고성수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주민들은 국책사업이나 도의 지원사업을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각종 규제, 절차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그리고 협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할 수 있다''노력해야 한다'등의 문구를 '해야 한다'로 수정을 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간담회 이후 계획에 대해 이상봉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완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오는 제1차 정례회에서 원만히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삼도2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점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6일 제주시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 방문은 상습 침수지역 등 자연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호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재해예방정비공사 현장을 찾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시 만조와 겹치면서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 12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인 곳이다.

양영식 위원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며,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방심하는 순간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사전에 재해예방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관계자들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화 지지 위한 실질적 도움, '관심'과 '모금'으로

미얀마 민주화지지, 연대를 위한 토론회

제주 정치·종교·사회계가 미얀마 민주화지지 및 연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미얀마 사태로 사망자 800명, 구금자 4,000명, 공개수배자 1,000명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시민이 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은 '지속적 관심'과 '모금 활동' 등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인권과복지사회를위한정책포럼(대표의원 고현수·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6월 14일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미얀마 민주화지지, 연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미얀마 민주활동가인 쿳다우(가명)씨는 "미얀마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3가지 투쟁방식을 선정했다"며 "첫째는 지속적 시위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군부의 총에 머리를 맞고도 끊임없이 거리로 나가 시위를 한다. 이에 제주 등 국제 사회로부터 SNS 등을 통한 지속적 관심과 응원을 요청한다. 실제 오늘날 미얀마 시민들은 SNS로 세계가 보내주는 지지 게시물을 읽으며 많은 힘을 얻고 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옳고, 시민들의 뒤에 전 세계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둘째로 노동자 총파업 유지다. 현재 현지 공무원을 포함한 미얀마 노동자들이 민주화 지지를 위해 4개월째 봉급을 받지 않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 모금 등이 요구된다. 실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통로로 모금이 이뤄지고 있으며 미얀마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으로 미얀마 시민이 현재 지지하는 미얀마통합정부(NUG)를 국제사회가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제주 종교계와 사회계는 이들의 역할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올리고, 모금을 통한 실질적 지원을 꼽았다.

환경도시위원회

신화역사공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점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에서는 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환경도시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송승천)와 함께 6월 11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신화역사공원을 방문해 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신화역사공원 내에서 배출된 오수로 인한 인근 마을 오수역류 사태 후 종합대책 시행방안 이행 여부에 대한 진행사항을 청취하고 실시간 오수유량계측 모니터링 장치, 중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등의 하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중수도 운영 실태와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다."며, "의정자문위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문 및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도내 환경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133개 전 노선 적자, '버스준공영제' 도마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전 노선 적자에 이용객은 제자리걸음을 보이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버스준공영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산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6월 18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시건설국과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등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송창권 의원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송 의원은 "준공영제 시행 이전보다 버스 수송분담률이 높아지는 등 눈에 보이는 개선점이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다 도민 혈세로 일반 사기업을 먹여 살려주는 꼴인데, 성찰과 다른 대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준공영제 133개 노선 중 흑자는 없고 전 노선이 적자다. 수송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다."며, "최근 준공영제 폐지부터 시작해 완전 공영제, 준공영제 보완 등 준공영제 관련 이야기들이 많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누가 도지사가 되는 공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큰 혼란이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학승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약자 등 소외계층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재정은 많이 들고 있지만. 개선방안이라든가 운행에 대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호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성산읍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와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인데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역에서 민원이 많다. 건축을 하려고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공항 계획이 발표되며 5년 넘게 개발행위를 못하다가 최근 해제되면서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하니 인건비, 자재비 등 오를 대로 올라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다."며, "이를 누가 보상할 것이냐고 묻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도든 국토부든, 환경부든 빨리 이 상황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 기증에 따른 이중섭미술관 현장 방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제39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21일 이중섭미술관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삼성가(家)에서 이중섭 원화 기증에 따른 이중섭 미술관 운영상황 및 특별기획전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이중섭미술관 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수증 의결된 작품 12점에 대하여 '70년만의 서귀포 귀향' 특별전시회가 오는 9월5일부터 22년 3월 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지난 제39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추경예산 심사에서 이중섭 원화 기증으로 도민사회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시장 규모 및 수장고 협소 문제, 앞으로 관람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편의시설 부족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는 "올해는 이중섭, 중광스님 등 유명한 분들의 작품 기증으로 인해 제주도의 소중한 문화예술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 문화예술의 섬으로 예술작품의 가치를 살리고, 관광산업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술관 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주문했다.

문화예술을 통한 제주관광의 새로운 길 모색

'제주관광 미래성장포럼' 6차 정책 토론회

제주관광 미래성장포럼 대표 오영희 의원은 6월 10일 대회의실에서 제주관광 미래성장포럼 6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영희 대표는 "'문화예술을 통한 제주관광'과 '예술여행도시 사례'라는 두가지 주제로 6차 정책토론회를 통해 미래 제주관광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제주의 경우 문화자원의 매력을 간직한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의 부재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홍보 등을 통해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문화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드코로나시대에 제주문화 콘텐츠의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관광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술여행 도시의 사례를 통해 우리 제주의 문화예술공간을 지역의 이야기가 있는 어울림의 공간을 넘어 함께 풍성함을 만드는 공간으로 진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의 '문화예술을 통한 제주관광'에 대한 첫 번째 주제발표에 이어 쥬스컴퍼니 이한호 대표가 '예술여행도시 사례'로 발표했다.

이어서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고선영 재주상회 대표, 박선주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tv조선 미스트롯2 심사위원), 김광수 미디어 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제주관광 미래성장포럼은 오영희 대표(국민의 힘, 비례)를 비롯해 양병우 부대표(무소속, 대정읍), 고태순(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이경용(국민의 힘, 서홍·대륜동), 김창식(교육위, 제주시 서부), 강연호(국민의 힘, 표선면) 6명이 활동하고 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신화월드 아웃렛-드림타워 찾아 의견개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제39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8일과 21일에 현장방문에 나섰다.

농수축경제위는 이날 오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월드 쇼핑아웃렛을 방문한데 이어, 오후에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를 방문해 대규모 점포 조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청취했다.

또 이날 현장방문에는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들이 함께 방문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현안문제 공유 및 자문을 진행했다.

다만 이날 신화월드 현장방문에서 쇼핑아웃렛 운영사인 신세계사이먼 책임자가 출석하지 않아 제대로 문답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농수축경제위는 신세계사이먼 책임자와 조만간 간담회를 갖고 지역상생방안 등에 대해 문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길호 위원장은 "신화월드와 드림타워의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제주도 및 지역상권과의 갈등과 문제점은 도민들이 거의 다 인지하고 계실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상공인단체들과 대규모점포 운영사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점, 충분한 협의과정이 부족한 점,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상반기 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6월 9일 소회의실에서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금까지 농·수·축·경제분야의 현안 사항과 주요업무보고, 안건심사 등을 의정자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농수축경제위원회 상반기 활동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의정자문위원들과 함께 상임위 의정활동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의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의정자문위원 제도개선 사항(서면제시), △ 상임위 주요 안건 심사 현황, △ 당면 지역현안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방향 및 의견수렴,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내용, △ 향후 의정자문위원회 운영방향 등이다.

현길호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지역경제와 당면 현안문제를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의정자문위원의 고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향후 정기적인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지속적(년 3회)으로 실시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정발전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는 지난해 9월 16일 분과 의정자문위원장(고양순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그 밖에 6명의 의정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학력저하 진단 위한 전수평가를

기초학력미달 학생·수준 파악 차원

'코로나19발 학력 저하'가 국가 공식 통계로 확인된 가운데 객관적인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및 학생 수준 파악을 위한 전수평가 실시 필요성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6월 18일 열린 제3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초학력 진단평가 문제가 도마에 올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교육청 집행부간 논쟁이 벌어졌다.

우선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중3·고2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언급했다. 제주에서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일부 학급에서 이뤄졌는데, 지역별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전년대비 주요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자 내년 9월부터 표집학교(급) 외 희망하는 모든 학교도 학년 초·중·말 중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2024년까지 평가 지원 대상 학년을 초3부터 고2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교육부가 학력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야 느끼고 개선했지만 내년 9월에야 가능하고, 결과는 2023년에 나온다. 그간 학습결손 책임은 누가 지느냐"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파악을 위해 올해 제주에서만이라도 전수평가를 실시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문영봉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돼있어 학업성취도평가의 전수 평가는 교육청이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현재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파악 및 맞춤형 지도가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제주시 동부)도 기초학력보정시스템을 신뢰하지만 일제고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기초 학력이 전국 또는 전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라 불안해하지 않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임을 밝혔다.

교육공무직 위상 정립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도내 교육 공무직원의 위상 정립을 위한 관련 조례안의 전면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민구 부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삼도 1·2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396회 제1차 정례회에 대표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위상 정립이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원이 교육현장의 일원으로 주요정책 및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처리 전담 창구 운영,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및 안전과 보건 등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정민구 부의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채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최초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면서, "조례 전면 개정을 계기로 교육공무직원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부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업무를 주체적이고 협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정민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김태석, 고은실, 고태순, 이승아, 문경운, 홍명환, 김경미, 강성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소개

체육 진흥 조례·제주돌문화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박호형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일도이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과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9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의 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주돌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람 동선을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근거를 마련했다.

돌문화공원은 22년 동안 총 1,449억 원이 투자되었으나 관광 약자들의 이동에 따른 관람의 불편, 편의시설 부족, 예산투자 대비 저조한 관람객의 문제 등에 대해 수년 차 지적되어 오고 있었다. 특히 돌문화공원은 2004년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바로 개발사업시행이 승인된 이후 2020년까지 투자되어 왔지만, 2006년 6월 일부 개원 이후 도내 직영관광지 중 최대의 적자 운영 기관으로서 관광지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박호형 의원은 "현실에 부응한 조례 개정은 매우 필요하다."며, "돌문화공원은 관광지로서 막대한 투자대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돌문화공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대폭 개정된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에 대해 제주자치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정민구 부의장

정민구 부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삼도 1·2동)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396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기존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집행 평가 등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한 반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선정,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촉직 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 위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나고 있지만 그 주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제한돼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예산편성 과정 및 이후의 사업 집행 모니터링 등 전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의 길을 확대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제주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5% 내외의 수준으로, 올해는 47건의 사업에 약 505억 원이 편성돼 있다.

제주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경미 의원 공동발의

농업과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통해 코로나 블루의 해소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사진왼쪽, 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업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양 의원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반 생산농업과 달리 치유가 필요한 대상자 맞춤형 농업활동으로 건강 취약계층의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의 과잉생산 문제 해소와 농지의 기능 유지 등 다양한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농촌진흥청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치유농업 활동이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의 인지기능을 19.4% 증가시키면서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감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를 공동 발의한 김경미 의원(사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전국 평균보다 5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 농업의 특성을 잘 살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인해 피로감과 우울감이 큰 요즘 시기에 치유농업 활동이 도민들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치유농업 관련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애월 수산마을과 지난해 한경 청수마을에서 치유체험장 및 치유공간 조성과 치유프로그램 시범 운영 등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제주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을 6월 8일 입법예고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도민들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죽음교육을 진흥해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 자치법규 중에서 '제주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주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주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등으로 도민의 인문교양,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등 도민의 인문소양 함양에 많은 지원을 해 왔다."며, "이번 조례제정은 지금까지 자치법규에 대한 성과로 조성된 인문소양을 바탕으로 도민 각자가 죽음 인식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해 인간 존엄과 가치 이해 속에 죽음 성찰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이상봉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이승아, 정민구, 현길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토론회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성 관련 정책간담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 부의장)는 5월 28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성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를 주관한 정민구 부의장은 "2020년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 중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제4조)'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며, "이 규정은 우리 제주특별법 제8조에 이미 도입된 내용이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 조항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우리 제주에서 먼저 논의하는게 필요하다고 느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정책간담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한 목진휴 명예교수를 비롯,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한 경희대 강제상 교수, 그리고 국민대 국정관리연구소 김희경 박사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연배 단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제주특별법과 도의회가 제·개정하는 조례 등 관련 입법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제주의 특별자치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단체로써 정민구 부의장,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 강성균 의원, 김경미 의원, 김대진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 위한 토론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에너지시민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에너지시민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공동 주최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가 6월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풍력자원의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고자 만들어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내실화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동주 전문연구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원,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 발제를, 종합토론 패널로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 제주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이 토론했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풍력자원의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고자 만들어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대한 운영 목적과 필요성, 기금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개선, 기금 운용과 활용에 대한 대안 등,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보고, 공유화 기금정책 등 산·연·관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 교류와 유대강화의 장이 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말 기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성액은 190억6,5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내역을 보면 이익공유화 기부금, 전력판매대금,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제주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경제신문과 공동 주최·주관으로, 제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6월 11일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탄소없는 섬(CFI) 2030 정책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력제어 등 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김희현 대표를 비롯해, 제주에너지공사 강병찬 지역에너지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를, 종합토론 패널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김미영 저탄소정책과장, 제주연구원 김현철 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김희현 대표는"제주 탄소없는 섬(CFI) 2030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작 제주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 이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연·관 전문가들이 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 교류와 유대강화의 장이 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은"

제9차 제주체육진흥포럼 전문가 토론회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안전한 해수욕장과 해양레저스포츠 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장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체육진흥포럼은(대표 이승아 의원)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해양스포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역방안 토론회'를 6월 14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제주도관광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해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과 더불어 해양레저스포츠를 안심하게 즐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조선대학교 김민철 교수로부터 '코로나19에 대비한 제주도 안심해수욕장 운영전략'을 주제로 전남지역의 안심해수욕장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서 본 제주 안심해수욕장 운영전략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김광경 제주관광협회 관광해양레저업분과위원장, 엄성운 ㈜제주바람의 언덕 대표, 최원진 제주도수중레저협회 회장,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이 참여하여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가운데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승아 대표의원은 "백신접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에도 코로나19의 발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럼에도 지난해와 같은 경제적 손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제 여름이 코앞에 왔는데 해수욕장을 찾고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함께합시다

신기한 제주어 ⑥

둔직ᄒᆞ다

(형용사) 묵직하다

<예문>

나릅 뒈는 해에 ᄒᆞ를은 일화아방이 부룽이 뒷모감지더레 멍에를 씨완게마는, 고망 똘른 둔직ᄒᆞᆫ 등돌 끗게ᄒᆞ곡 앞이서 쉐석 잡아둥기멍 "부룽이야, 심내영 ᄯᆞ라와 보라" ᄒᆞ여놓고 동네 서너바쿠 도는 거라. 부룽이는 똠 찰찰 흘치멍 "이거 무산고?" ᄒᆞ멍도 주연이 시기는 거난 속솜ᄒᆞᆫ냥 심들게 등돌 잡아둥기멍 ᄯᆞ라뎅겻주.

'도의회 광장'에서는 2021년부터 양전형 님의 '제주어용례사전①'에 실린 제줏말이 600여 예문 속에 쓰이는 용례를 게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나릅, 나롭 : 소의 네 살
ᄒᆞ를은 : 하루는
뒷모감지더레 : 뒷목에다
씨완게마는 : 씌우더니만
고망, 고냥, 구녁, 구녕, 구먹, 굼기, 궁기 : 구멍
똘른 : 뚫은
끗게ᄒᆞ곡 : 끝게 하고
석 : 마소를 매어 몰고 다니는 고삐
잡아둥기다 : 잡아당기다
심내영 : 힘내서
ᄯᆞ라와 보라 : 따라와 봐라
바쿠 : 바퀴
똠 : 땀
찰찰 : 줄줄
흘치멍 : 흘리면서
이거 무산고? : 이거 웬일인고?
ᄒᆞ멍도 : 하면서도
시기는 거난 : 시키는 거니까
속솜ᄒᆞᆫ 냥 : 조용한 채로
심들게 : 힘들게
ᄯᆞ라뎅겻주 : 따라다녔지

멍에, 멍에냥 : 밭을 가는 소의 목에 걸치는 뭉툭한 반원형 나무
등돌, 뜸돌, 뜽돌, 드름돌 : 둥그스럼하고 매끈한 큰돌로 짚 따위를 두드릴 때 받침 등으로 쓰기도 하고 힘을 겨룰 때 쓰기도 하는 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일정

월별	회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계	10회	총137일 · 정례회 2회/47일 · 임시회 8회/90일	본회의 28일 상임위 55일 예결위 19일 공휴일 35일	
2월	제392회 임시회	2.22.(월) ~ 3.4.(목)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3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 원 선임 · '21년도 주요업무 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3월	제393회 임시회	3.17.(수) ~ 3.25.(목)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94회 임시회	4.20.(화) ~ 4.30.(금) (11일)	본회의 6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95회 임시회	5.28.(금) ~ 6.9.(수) (1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96회 제1차 정례회	6.15.(화) ~ 6.30.(수) (16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예결위 5일 공휴일 4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97회 임시회	7.14.(수) ~ 7.21.(수)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9월	제398회 임시회	9.7.(화) ~9.14.(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99회 임시회	10.12.(화) ~11.3.(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11.15.(월) ~12.15.(수) (31일)	본회의 6일 상임위 8일 예결위 9일 공휴일 8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2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01회 임시회	12.17.(금) ~12.23.(목)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공휴일 2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 13일

생활 & 법령뉴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6월 1일부터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부동산등의 계약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신고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할 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었지만,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가 없어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에 시행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적용지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함)·자치구
적용대상	주택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후 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도입을 통해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도 정확한 시세정보를 파악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Q&A

청렴실천 당당대한민국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돼요

Q 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직원 중 1인이 타 국가연구기관에서 보고서 중 한 부분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가는 400만원이고 기간은 1개월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개인 용역으로 신고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말하며, 이 경우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보고서 작성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타 국가연구기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례금을 제공받는 것이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원 기고

제주 안전관광의 혜안이 필요할 때

최근 제주도 관광객수는 내국인 개별관광객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상당폭 증가하였다. 제주관광협회에서 집계한 코로나 이전·이후 관광객 입도동향을 보면 2019년에는 매월 평균 127만 3천 여명의 수치를 기록한 반면, 코로나가 확산되었던 2020년에는 평균 수치를 넘어선 달이 한 번도 없었다. 그나마 최근 4월, 5월의 경우 각각 108만 2천명, 112만 1천명(잠정)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제주 재방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1인당 소비규모도 커지면서 관광 관련 산업에서 소비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는 있으나, 세부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개별여행객 증가로 호조를 보이는 렌터카, 골프장과는 달리 전세버스, 여행업 및 중소형 숙박업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부분 패키지 상품 마련의 혜안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 관광업계 지원방안에 대하여 부분패키지 회생방안과 방역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검토를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고용노동부가 8일 고용유지지원금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그나마 관광업계가 숨통이 트이게 되었지만,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종 가운데 여행업,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 전세버스·항공여객운송 등 3분의 1이 관광산업일 정도로 업계에 미치는 타격은 컸다.

제주의 경우는 진정과 확산의 경우를 보이는 전국의 상황과 달리 확진자 추세가 위험단계에 이르고 있다. 확진의 급증은 불가항력이지만, 입도객 검역강화와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는 방안 이외 대책 마련은 어려워 보인다. 그런 가운데 제주도민 대상의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정부에 전달됐다. 제주는 국내에서도 해외여행의 대체관광지로 손상이 없는 곳임은 확실하다.

코로나의 파급력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타격은 관광분야이다. 전파력이 크고 감염에 따른 위험성이 커서 여전히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되는 것을 최근 제주지역의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다시금 상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역강화를 통한 감염자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제적 백신접종은 도민만이 아닌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는 안전(방역)과 경제(관광)의 균형을 맞춘 제주형 방역관리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오기 전 제주 안전관광의 혜안이 필요할 때이다.

문경운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류지를 활용한 지역주민 공간 마련 필요

최근 여름철 장마보다 초가을 장마가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태풍의 경우 높은 온도의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수증기가 많을수록 태풍의 위력이 세지는데 시기적으로 8월 말~9월 초는 대만과 필리핀 인근 바다의 온도가 연중 가장 높고, 그 시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져 태풍이 곧바로 우리나라로 북상하기 때문에 가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이처럼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도 있지만, 제주가 지난 몇 십년간 도로개설, 택지개발, 대규모 개발사업 등 개발로 인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도 침수피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하천의 설계홍수량을 100년 빈도로 상향시키면서 도심지를 관통하는 흘천, 병문천, 한천, 산지천에 대해서 홍수조절용 저류지를 시작으로 저류지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저류지의 경우 설치 대상에 따라 목적이 다르다. 하천 및 수로에서는 유출량 증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홍수조절 목적으로 설치하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우수를 처리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수를 저류지로 모아서 자체 침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공공에서 설치한 저류지는 299개소로 설치 사업비만 3,606억원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저류지가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시 저류지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아 기능 및 위치 등의 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택지개발 시 설치된 저류지의 경우 도로에 내린 우수가 우수관으로 유입되는 양보다 노면을 따라 저지대로 흘러가 사실상 저류지로 모이는 우수의 경우 극히 일부이다.

실제로 아라동의 경우 2014년 아라택지개발지구 시 설치된 저류지가 3개소이나 집중호우 시에도 저류지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아 인근 지역주민들이 저류지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류지 부지를 활용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저류지를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향후 공공용지에 조성된 저류지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내에서도 저류지를 공원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도에서는 현재 저류지 정밀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과업내용에 저류지 기능개선뿐만 아니라 다목적 활용 가능한 저류지를 선별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쾌적함을 주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고태순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기고

일상 파고든 코로나19

6월은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시기다. 정부의 계획대로 백신접종이 이루어진다면 6월 말까지 국민 전체의 25%인 1,300만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무리하게 된다.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것이며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등 전국 확진자 수는 4~500명대를 유지하면서 횡보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깊숙이 파고들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급속한 확산으로 3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지난달에도 한 달 동안 328명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가족, 지인 모임 등 접촉이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접촉자로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가정과 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 동안 최고 26명을 기록하는 날도 있었고 평균 10명 내외로 두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상향해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23시로 제한하고, 결혼식·장례식장도 99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집중방역 점검기간'을 지정해 소관 부서별로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금 제주지역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사 자리를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 사람간 만남과 접촉을 최대한 미뤄주기 바란다. 방역방국의 노력과 더불어 개개인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히 필요한 6월이다.

변희정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씨름 통한 한민족 동질성과 평화기반 구축

'제주 남북씨름교류 20주년 의미와 과제'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6월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한씨름협회(회장 황경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이종걸)와 공동으로 '제주 남북씨름교류 20주년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심승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2003년 제주에서 개최된 남북씨름교류가 유네스코 인류문형유산 공동등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평화축전 지속화는 남북한의 씨름뿐만 아니라 문화교류가 협력의 씨앗이 되는 무형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체육위원장(경기대 교수)는 "2023년은 남북씨름교류 20주년과 유네스코 인류문형유산 공동등재 5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경훈 제주특별자치도씨름협회장은 "남북씨름교류를 기념하는 전국규모의 정규 씨름대회와 씨름평화 공원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전통씨름이 평화와 역사성이 내포돼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한 간 씨름대회는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민족의 민속스포츠인 씨름이 남북교류의 중요한 매개체가 돼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 공존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3 수형인 명부발굴 김재순 관장, 제주 명예도민 추진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서 추미애 의원에게 제주4·3 수형인명부 원본을 설명하였다(1999년 9월)

1999년 9월 15일 추미애 의원이 제주4·3 수형인명부를 최초 공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제주4·3 진상규명을 위한 수형인명부 최초 발굴을 주도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김재순 관장을 6월 1차 정례회에서 명예도민으로 선정한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제주기록원 설립방안 토론회를 준비하며 나라기록관 김재순 관장을 토론자로 섭외해 제주기록원 설립 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김재순 관장이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발견한 인물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한 수형인명부를 당시 추미애 국회의원에게 전달, 제주4·3 진상규명위원회와 검찰청 등에 제공돼 4·3의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의 결정적 자료로 활용되도록 했다. 4·3평화기념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가기록원 전시관 등의 전시자료로 활용하여 국민들이 제주4·3의 진실을 이해하는데 기여했을뿐만 아니라 최근 수형인 관련 재심을 청구하는 근거 자료가 됐다"고 소개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제주의 발전 및 아픈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선 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제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명예도민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와 1992년 정부기록보존소 연구직 1호로 입사해 1999년 공공기록물법 제정, 2004년 전자기록관리체계 설계에 기여했다. 국가기록원 주요 과장을 역임한 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제주도의회-전남도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 맞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등 '상생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와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6월 22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양 의회 의장과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의회의 교류협력 제안을 전라남도의회가 적극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양 의회간 상생발전 협약을 통해 상호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상임위원회 연찬회 교차 실시, 합동 심포지엄 개최 및 교류협력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무엇보다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공동 추진하기로 의기 투합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의지와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 등 공통점이 많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비대면 표결 시스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비대면 본회의 운영시스템을 도입했다. 감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안건을 표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주도의회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않고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원격 표결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코로나19로 주요 기관들의 집합회의가 장기간 잠정 연기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비대면 표결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도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해 재난 상황 발생 시 비대면으로 표결을 부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본 예산에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15일 전체 도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스템 가동 방식을 시연하고 사용 교육을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해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 의원실에서 본회의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면서 의사 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게 된다.